

# 남북의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와 표준 협력 과정 및 표준 통합의 방향과 전망\*

정 병 기 | 영남대학교

북한은 중공업과 생산시스템 등이 강하고 정부가 제반 표준화 과정을 주도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낮은 반면, 남한은 정보통신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이 고도로 발전했고 표준 제정만 정부가 관장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매우 높다. 남북 표준 협력은 주로 민간 기구를 매개로 하거나 국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표준 제정 기구들 간의 직접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표준 통일을 위한 남북 표준 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이 공통적으로 긴요한 산업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남한의 표준 제정 기구를 독립 공공 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통일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국제 표준화 기구 및 제3국을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표준 통일, 표준 협력, 사회 통합, 한반도 통일, 통일 한국

## I. 서론

한반도에서 통일이라는 화두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통일된 열망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미 분단 70년을 넘어가면서 그 열망의 온도차는 커져갔다. 하지만 이것은 통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역설로 작용하며 정부에서도 통일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역설은 주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자칫 이를 경시할 경우에는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강력하게 표출되는 현상이 이질성의 확대이며, 이 이질성의 확대를 심각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3-A2043505).

하게 촉발시키는 주요 요인이 기준과 규범의 괴리다.

표준은 한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기준과 규범으로 작용한다. 각종 제품 및 재료의 규격<sup>1)</sup>과 사회 간접 자본의 기준 그리고 언어와 기호 및 기구와 제도에 관한 규준들은 표준으로 표현되며, 국제적으로도 그 의미와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산업표준과 단체표준 및 사회적 책임 표준이나 기타 국제 표준들이 그 대표적 형태들이다. 표준은 한 사회의 정치 경제적 통일과 통합<sup>2)</sup>의 시금석이 될 뿐 아니라 그 통일과 통합을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유럽 표준 통합과 독일 표준 통일의 과정이 이를 잘 예시하고 있다.

이 글은 한반도 통일과 남북 통합을 위한 표준 통합의 방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 통합의 진행 여부나 그 정도가 한반도의 통일과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시적 수치로 환산하여 제시할 때 그것은 막대한 통일 비용의 한 요소로 뚜렷하게 부각된다. 통일 시기와 누산 기간에 따라 여러 연구기관들이 다양하게 추산하는 통일 비용은 적게는 160조 원에서 많게는 1,237조 원에 이르며, 그중 비표준화로 인한 비용은 8~17%로 추정된다(강성표 외 2001, 2). 이것은 국가 통일에 앞서 표준 통일을 위한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최소 13조 원에서 210조 원의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은 산업 표준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에 한정된 추산일 뿐이다. 맞춤형 통일안과 각종 사회 규범들을 아우르는 인문 사회적 표준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더욱 절감될 것이다. 게다가 이것을 경제적 효용으로만 환산하지 않고

- 
- 1) ‘규격’은 제품이나 재료의 품질, 모양, 크기, 성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광공업 제품과 관련해 사용되어 초기에는 표준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점차 ‘표준’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규격’은 표준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되다가 최근에는 표준 개념으로 대체되는 추세다(위에서 ‘제품과 재료의 규격’이라고 쓴 것은 표준의 하위 개념으로서 제품과 재료의 성질에 한정되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와 달리 북한에서는 여전히 ‘규격’을 공식 개념으로 사용하며 국가 표준을 ‘국규(국가규격)’라고 칭한다. 다만 법적 강제성 없는 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체계화를 말할 때에는 규격화의 유의어로 ‘표준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정병기·김찬우 2013, 164; 이진량·정병기 2014, 182).
  - 2) 이 글에서 통일은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개체로 단일화하는 것을 말하며, 통합은 이질적인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들이 동질적 성격을 획득해 조화로운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곧, 통합은 통일에 비해 과정과 다양성을 더 강조함과 동시에 통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치적 통일 후 다양하게 나타날 사회적·심리적 분단과 갈등을 치유하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그 사회적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통일뿐 아니라 통일 후 통합을 위해서도 표준 통합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정부도 이러한 표준 통합의 의미를 간과하지 않았다. 특히 2002~06년에 추진된 ‘남북 표준통일 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 조성’ 사업은 그 대표적 성과다. 이 사업에 대한 연도별 보고서와 이 사업을 통해 촉발된 다양한 정책 연구 보고서들은 향후 표준 통합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들이다.<sup>3)</sup>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들 외에 학술적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못했다. 학술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기정훈(2014)과 윤덕균(2000a; 2000b)이 제출한 각 한두 개의 논문들뿐이다.<sup>4)</sup>

가장 최근에 표준 통합을 연구한 기정훈은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그 모형을 통해 남북한 표준체계 비교 방안과 통일의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및 통일의 단계에서 표준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해 이 분야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윤덕균의 두 논문도 북한의 국가 규격과 한국의 국가 표준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해 중요한 정책적·학술적 발전에 한몫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정치 경제적 현실에 착목하기보다 바람직한 통합의 상을 전제하거나 현실 고찰을 표준에 국한시켜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된 남북 표준 협력 노력들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와 달리 이 글은 표준의 사회 통합 기능에 주목하되 정치 경제적 현실을 토대로 하여 남북 표준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 통합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글이 분석할 주요 질문과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간 표준과 표준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표준과 표준화의 범위가 매우 방대하므로 이 차이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둘째, 그동안 남북 표준 협력은 어떻게 추진되었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남북

3) “남북 표준통일 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서,” 한국표준협회 연차별 중간 보고서(2002~2005)와 최종보고서(2006) 등과 한국표준협회(2004b)를 참조. 그밖에도 여러 부문에 걸쳐 포괄적 관심을 보이거나 표준 정책 일반에 관해 다룬 보고서로는 한국표준협회 북한표준연구소(2000), 강성표 외(2001), 박승덕 외(1997), 조명철·정승호(2007), 한국표준협회(2006b)의 보고서가 있고, 부문별로 연구한 보고서로는 비전이십일권선텅(2004)과 이춘근(2005)의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4) 그밖에도 윤덕균은 이 연구를 더 구체화시켜 2005년 10월 남북 표준 심포지엄에서 “분야별 남북 표준 통합 추진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간 표준 협력은 2000년대 초반 ‘남북 표준통일 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가시화되었으므로 이 사업에 대한 보고서들을 일차 자료로 하여 분석한다. 그 밖에 국제표준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전개된 협력 활동들을 별도로 고찰해 분석에 참조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과 통일 후 사회 경제 통합을 위해 표준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물론 통일 국가의 표준 통합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북한 정치 경제의 현실을 토대로 표준화 정책의 변화를 알아보고, 다시 이를 기반으로 통일 이전의 남북 간 표준 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다루어질 것이다. 통일 국가의 표준화 정책은 통일 이전의 표준 협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제III~V장)은 질문의 순서에 따라 세 장으로 이루어진다. 분석에 앞서 이어지는 제II장에서는 이 글의 전제가 되는 표준의 사회 통합 기능을 살펴보고 이것이 한반도 통일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표준의 사회 통합 기능은 규범성 및 거버넌스와 관련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논하며, 한반도 통일과의 관련성은 표준 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 논의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전제와 배경 지식을 기술하려는 것이다.

## II. 표준의 사회 통합 기능과 한반도 통일

사전적 의미에서 표준은 “사물을 정하는 목표나 기준”을 뜻한다(이희승 2014). 이때 목표는 ‘행동을 취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으로 최종 지점인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달성해가는 구체적 대상을 뜻하며, 기준은 ‘그 목적에 맞추어 사물을 측정해 판단하는 기본’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준은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목적과 연결되는 목표가 된다.<sup>5)</sup>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정에 따르면, 표준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상태에 도달함을 목적으로 활동이나 그 결과에 대해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사용, 규칙, 가이드라인 혹은 성질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공인된 기구에 의하여 합의에 기초해 제정된 문서”다(ISO/IEC 2004, 12). 공식표준(de jure standards)에 한정된 이 규정을 사실표

---

5) 표준의 개념과 규범성 및 규제성에 대해서는 정병기(2013, 245-252)를 참조.

준(de facto standards)까지 포괄하도록 다시 정의하면 표준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상태에 도달함을 목적으로 활동이나 그 결과에 대해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사용, 규칙, 가이드라인 혹은 성질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합의에 기초해 제정된 목표나 기준”이다(정병기 2013, 247).

이처럼 표준의 핵심을 목표와 기준으로 볼 때 표준은 하나의 규범(norm)으로 볼 수 있다. 부시(Busch 2011, 23-24)에 따르면, 관습, 윤리, 도덕 들과 같이 인간과 인간 관계에만 적용되는 사회 규범과 달리, 표준은 인간과 사물 및 양자 관계에 모두 적용되므로 사회 규범을 포괄하는 규범이다. 물론 표준도 대개 사회 규범에 근거하고 있고, 사회 규범을 너무 벗어나는 표준은 수용되기 어렵다(Brunsson 2000, 30). 하지만 생활의 편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량형 같은 측정 표준처럼 사회 규범과 무관한 표준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표준은 권위(authority)와 관련되어 어떤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규범인 법령과도 다르다(Brunsson and Jacobsson 2000, 12-13). 법령은 소속 집단의 리더십에 따른다는 점에서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며, 명시적이고 명백한(explicit and evident) 자원을 토대로 제정된다. 이와 달리 표준은 기술 기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표준을 넘어서면 집단 소속이나 권위와 무관하며 그 준수가 의무적이지 않다.

하지만 사회 규범과 법령으로부터 표준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법령과 일치되는 기술기준 같은 표준이나 사회 규범과 중첩되는 표준이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법령의 경우도 그 준수가 항상 의무적인 것은 아니어서 지원이라는 적극적 유인책과 과세·벌금 같은 부정적 혹은 간접적 유인책도 존재하며 타협과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의해 제정되기도 한다. 사회 규범 역시 비록 강제성을 띠지 않더라도 사회적·구조적으로 실질적 구속력을 갖기도 하며 조직의 행위 규율처럼 명시적이고 명백한 자원을 갖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 규범, 법령과 표준은 유사하면서 때로 중첩되는 거버넌스(governance) 규범의 세 유형이며, 특히 표준은 가장 광범위한 대상을 다룸으로써 다른 두 규범을 포괄한다.

거버넌스 개념은 국정 관리 유형이나 공동체적 자율 관리 체계 혹은 조정 양식의 원형이나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된다(김석준 2000, 41; Rhodes 1997, 15).<sup>6)</sup> 정치학에서는 주로 다원적 주체들 간의 협력적 통치 방식을

6) 이하 표준과 관련된 거버넌스 논의에 관해서는 정병기(2015a, 268-269)를 주로 참조.

의미하는 네트워크 통치, 협력적 통치 또는 통치 체제나 통치 활동 등으로 정의된다. 공통적인 것은 강력한 개입 국가적인 과거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시장과 사회의 참여를 허용하는 새로운 협력적 통치 방식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원칙들은 정통성, 효율성, 민주주의, 책임성이다(Kjær 2007, 24-26). 정통성은 투입 측면에서는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받는 사람들의 합의로부터 형성되며, 산출 측면에서는 규칙이 구체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정책이 공동선에 부합할 때 생겨난다. 따라서 정통성은 민주적 효율성과 연결되는데, 민주주의는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는 협의와 합의를 중시하므로 다수결 민주주의를 폐기하지는 않지만 다수결 민주주의보다는 합의 민주주의에 가깝다. 또한 거버넌스는 민주적 책임성과도 연결되는데, 이 책임성은 대의 민주주의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로 충족된다.

표준이라는 규범을 제정하고 실현하는 것은 이러한 거버넌스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표준화(standardization)라고 한다. 따라서 표준화 거버넌스는 인간 생활과 관련되는 제반 사안들에 대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합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협치(協治)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표준화 거버넌스는 조정을 통한 사회 통합 기능과 밀접히 관련된다. 어느 사회에서든 통합은 규범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규범이 강제적이 아니라 동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때 통합은 보다 견고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은 동의와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자발적 수용을 전제로 하므로<sup>7)</sup> 진정한 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 표준(SR: ISO 26000)에서 보는 것처럼 한 국가 내에서나 국가들 간에서도 새로운 통합 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규범의 측면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차적 통합의 대상은 경제 사회다. 상품과 화폐로 움직이는 경제 사회는 표준 같은 단일 규범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회 문화 영역도 그와 연동되는 통합 대상이다. 경제 사회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이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 삶과 직결되는 부문의 합의를 거쳐 문화와 가치의 영역으로 통합 규범의 필요성은 확대되어 간다. 이때 여러 문화 공동체들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고 상호 동의와

7) 물론 사실표준은 시장에서 공급자들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 강자의 힘이 작용하므로 구조적 권력의 작동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소비자들의 수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동의라는 전제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합의를 추구해나갈 때 사회 통합 규범으로서 표준은 더욱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통일 이전의 철도 표준들을 존속시키고 TV 수상기 표준을 통합함으로써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활성화한 동서독의 표준 정책은 이러한 사회 통합 기능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표준의 사회 통합 기능을 일찍 인식한 유럽연합도 제도와 관행이 다른 회원국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유럽표준화위원회(CEN)를 적극 활용했다. 곧, 유럽연합은 신접근 전략(New Approach)을 통해 보건·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기술기준들을 유럽표준에 부합시켜 경제 및 사회를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한반도 통일에서 표준 통합은 비단 경제적 효과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제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 못지않게 남북의 생활 방식과 심리적 괴리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일 국가를 겨냥한 표준화 작업을 새롭게 형성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민주적·효율적으로 조정해가는 표준화 거버넌스의 방식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면, 표준 통합은 한반도의 통일과 통합의 핵심 영역이 될 것이 자명하다. 물론 그 표준 통합은 국가 통일 이전의 협력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통합을 지향하는 통일의 궤적을 밟아야 할 것이다.

### III. 남북 간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

남북 간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는 크게 표준화 제도의 차이와 개별 표준의 차이 및 국제표준화의 차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표준화의 차이를 별도로 고찰하는 것은 국제표준화가 국제 관계를 중요한 변수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에만 적용되는 국가표준화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표준화는 분단 상황에서도 긴급한 표준 협력뿐 아니라 향후 표준 통일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부각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우선 표준화 제도의 차이를 보면, 그 수립 과정에서부터 이데올로기 대립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서구의 표준 체계를 따르고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표준 체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은 서구 표준체계를 수용한 일본 표준 제도를 도입했으며,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표준 제도를 따랐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은 동일하며 그로 인해 유사한 국가 주도 표준화 체계를 수립했다.

남한의 산업표준화법에 대응하는 북한의 관련 법은 규격법이며, 남한의 산업표준(KS)에 해당하는 북한 국가 표준은 국가규격(KPS)이다. 남한도 비록 국가가 표준화를 주도하지만 표준 체계가 분야별로 다양하게 분포할 뿐 아니라 표준의 교육과 보급이 한국표준협회라는 독립 공공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가 제반 표준화 과정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데, 그 주요 조직은 내각 과학원 산하에 설치된 총괄기관인 국가품질감독국과 그 산하 기관인 국가규격제정연구소와 중앙품질및계량과학연구소(조명철·정승호 2007, 6). 이 체계는 북한이 정부 수립 초기에 소련의 차관 및 원조를 받아 산업 기반을 형성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과정은 북한의 표준화 제도 수립이 제3공화국의 경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남한 표준화 제도 수립보다 빨랐음을 의미한다(한국표준협회 2003b, 7; 이진량·정병기 2014, 187). 남한에서 현대적 의미의 표준화는 5·16 군사정변 직후 군정 시기인 1961년 9월에 제정된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같은 해 11월 상공자원부 산하에 표준국이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비록 현행 규격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지만, 1949년에 규격화 사무국을 설치하고 1954년에 국가규격제정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북 간 개별 표준의 차이는 경제 발전 정도 및 산업 구조의 특징과 관련된다(정병기 2015b, 239-241; 한국표준협회 1996; 한국표준협회 2003b). 특히 중요한 산업 분야의 예를 보면, 북한에는 자동차·조선·항공 산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분류가 발달하지 못해 표준 분류는 운송 수단과 운송 용기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남한에서는 수송기계, 조선, 항공 등 3개 분야로 세분되어 표준이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다(비전이십일컨설팅 2004, 40).

전체적으로 북한의 산업 구조는 경공업 부분이 매우 취약하고 중공업과 생산시스템 등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것은 남한 제3공화국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 개발 계획과 유사한 맥락이다. 하지만 정보통신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서비스 산업의 팽창을 겪은 1990년대 이후 남한과는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준의 적용과 구속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이상조 2001, 52). 남한의 표준은 기업에 의해 선택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반면, 북한의 규격은 현실사회주



의 성격에 따라 규격서 자체에 강제적으로 채택하게끔 명시되어 있어 강제성이 강하다. 곧,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중앙정부가 그 제정과 보급을 관장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만큼 북한의 규격은 양적으로 남한의 표준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비전 이십일권설칭 2004, 40). 그렇지만 경제와 산업 구조의 발전이 차이를 보이는 만큼 그 질적 수준은 남한의 표준에 뒤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반영해 개별 표준의 상이함은 더욱 우려할 만하다. 그 차이를 전 산업에 걸쳐 상술할 수는 없으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본다. 우선, 철도 부문에서 남한은 2만5천V 교류를 사용하는 반면 북한은 3,000V 직류를 사용한다. 기관차의 신호제어 방식도 달라 철도가 다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전기기관차 운행은 불가능하다.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디젤기관차를 북한 기관사가 동행해 저속으로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 용어도 천차만별이다. 북한에서는 드라이버를 나사틀개, 케이블을 까벨, 사인(sine)을 시누스로 부르며, 컴퓨터 자판이나 목차 배열에서도 남한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TV전파 송출 방식도 북한에서는 PAL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남한에서는 NTSC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전 전압은 220V로 같지만 발전소에서 철탑을 통해 개별 변전소로 보내는 송전 전압도 다르다. 이 사례들은 모두 에너지나 사회간접 자본과 연결되어 경제 협력과 사회 경제 통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국제표준화와 관련해서도 남북 간 차이는 크다. 표준화 도입 시기에 일본 표준을 모델로 한 남한 표준은 업종별 및 분야별로 2단계 분류를 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 규격은 용도 및 제품 위주로 3단계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어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분류 체계(I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Standards)에 더 부합한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코드는 남한 산업표준이 ICS 분류표를 더 정확하게 따르고 있으며,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정도는 2006년 기준으로 99.9%에 달한다(조명철·정승호 2007, 2, 47, 53). 반면 북한의 국가규격인 KPS는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표준 부합화를 시작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북한도 이미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는 남한과 함께 1963년에 가입해 국제 표준화 활동을 일찍부터 시작했다. 가입 당시부터 남한은 꾸준히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속해 1993년 이후 ISO 이사국에 진출하고 2006~09년에는 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의장국을 역임하는 등 뚜렷이 두각을 나

타내기 시작했다(정병기 2015b, 149). 물론 북한은 1980년대 후반 현실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시장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이진량·정병기 2014, 190-193). 북한의 국제 표준화 활동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되었는데, 특히 2002년을 전후해서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1994년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원 자격을 상실했던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도 2002년에 준회원 자격으로 재가입했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 표준화 활동 무대는 남한과 북한의 표준 협력과 표준 통일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IV. 남북 표준 협력의 과정과 성과 및 한계

남북 표준 협력은 남북 양자 협력과 제3국 혹은 국제 표준화 기구를 포함하는 국제 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남북 표준 협력은 1991년 12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타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 및 1992년 9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산업 표준의 교류에 대해 합의한 것에 기원한다. 곧 이 합의서를 통해 ‘경제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 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한다’고 합의한 것이다(한국표준협회 2003a, 8).

남북 양자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표준화를 정부가 관장하므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따라서 남북 양자 협력은 정부 표준화 기구들 간 협력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협력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그것도 제3국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해외에서 진행된 협력들도 제3국을 포함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 협력이 아니라 양자 협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성과가 1994~96년 중국 연변에서 세 차례 개최된 ‘코리안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ICCKL)’였다(한국표준협회 2003a, 8; 한국표준협회 2004b, 48). 이 회의를 통해 전산용 한글 자모순, 전산 분야 용어사전 공동 편찬, 컴퓨터자판의 구조와 배치 및 한글 부호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북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비록 산업계에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학술회의 형태로나마 남북 간 직접 교류를 통해 마련한 표준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학술 교류는 2002

년부터 남북산업표준세미나를 통해 이어졌다.<sup>8)</sup>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은 2002년 산업표준 공동 연구소 설립과 남북 표준화기관 및 시험·검사·인증기관 전문가 간 교류협력 추진으로도 나타났다(한국표준협회 2002, 36-37). 공동 연구소 설립 사업은 2002년부터 서울, 평양, 온정리 등지에서 시작되었으며, 평양의 고려정보기술센터(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남한의 엔트랙이 합작하여 건립) 내에 한국표준협회가 입주하는 것으로도 연결되었다. 표준화 전문가 간 교류 협력도 역시 2002년부터 한국표준협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한편 정부 표준화 기구들 간 협력은 민간 차원 협력의 선례를 따라 때로는 민간 기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규격과 표준을 교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 교환에서 남한은 북한에 직접 표준을 제공한 반면 북한 규격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남한에 제공됨으로써 직접 교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한국표준협회 2003a, 11-13; 한국표준협회 2005a, 62). 우선 2002년 4월 교역 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에 한해 기계·전기·화학·건설 분야에서 560종의 규격과 국가규격 목록이 러시아를 통해 남한에 제공되었다. 그에 따라 남한은 같은 해 7월에 북한 국가규격제정연구소에 기본·기계·전기 분야 산업표준 3,876종을 제공했다. 이어 남한은 2002~03년에 제정된 ISO/IEC 17020에 대응하는 북한 국가규격 ‘여러 형태의 검사기관들에 대한 일반적 운영기준’ 등 67종 최신판을 중국을 통해 입수했다.

이러한 교환 작업을 통해 2002년 하반기부터는 남북 산업표준 실무회담을 열고 남북 산업표준 세미나를 개최하는 성과가 이어졌다. 그 첫 번째 회의가 2003년 12월 20~24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회의였다. 이 회의는 비록 조총련 과학기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지만 남북의 표준당국자 및 실무자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향후 협력 사업 추진과 공동 프로젝트 개최에 합의해 표준화 기구 간 직접 만남의 물꼬를

8) 그 첫 세미나는 2002년 8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언어정보세미나였다. 남한에서 KAIST 최기선 교수 외 16명이 참가하고 북한에서는 사회과학원 어문학연구소 문영호 소장 외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말규범, 전문용어, 컴퓨터자판, 코퍼스(말뭉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결과 남북은 과학기술용어 및 규격 용어 정리, 컴퓨터자판 개선안 평가, 문자코드 변환프로그램 개발, 동사 유형 정보 구축 등에 대한 과제 도출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한국표준협회 2003a, 25).

튼 것이었다(한국표준협회 2004a, 24).

이를 토대로 2003년에 남북 공동연구 추진 합의서가 체결되고 이후 그에 따라 북한 정보산업규격 31종에 대한 남북 통일안이 도출되는 등 직접적 성과들이 제출되었다(한국표준협회 2005a, 38-54). 우선 남북은 2003년 12월과 2004년 7월에 각각 북경과 심양에서 산업표준 협력회의를 개최해 정보산업규격(약 40여 종) 표준화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했고 이를 위해 남·북·재일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가 참여하는 ‘남북 정보기술표준협력위원회’와 협력사무국 구성에도 합의했다.<sup>9)</sup> 특히 심양 회의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고, 7차례의 심의를 통해 남과 북이 각자 기본안을 제출하고 토의를 거쳐 ISO/IEC 2382에 대응하는 남북 정보산업규격 통일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것은 남북이 합의하여 도출한 최초의 통일 표준안이었다.

사실 남한과 북한의 표준 제정을 담당하는 표준화 기구가 모두 정부 기관으로 되어 있어 표준 제정 기구들 간 양자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민간 표준화 기구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협력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를 표준 제정 기구들 간 협력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포기되지는 않았다. 2004년 9월 남한 민간 표준화 기구 협의체로서 북한 국가 표준화 기구에 대한 대화 창구인 ‘남북기술표준협력단’<sup>10)</sup>이 구성되어 수요 조사를 통해 공동 발굴한 협력 과제(15개)를 북한 ‘국가품질감독국’에 제안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한국표준협회 2005a, 55-62). 그 제안은 표준의 신규 제정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국제표준을 기초로 하여 향후 통일 부담을 줄이고, 상호 초안을 제공하여 상호 검토시스템을 도입하며, 이미 제정된 표준과 관련해서는 통합이 가능한 것부터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제안도 결국 정부 기구들 간 직접 교류의 난관에 부딪혔다. 위 제안에 대해 북한 국가품질감독국은 북한 내부사정으로 인해 현실적 측면에서 남북 당사자 간 표준협력회의 개최가 어려우므로, 중국이 남북의 표준화기관을 초청하는 국제회의의 형태를 취하자고 답변한 것이다.

9) 재일본 조선인도 참여했지만, 이들이 일본의 국가 대표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회의도 국제 협력의 형태가 아니라 남북 양자 협력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

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중심으로 한국표준협회(KS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참여하지만, 협력단 발족에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가 참여했다.

이와 같이 민간 차원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남북 간 국제 협력은 정부 기구들 간 대화가 어려운 현실에서 표준화 기구들 간 양자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대안이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국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그 태동은 이미 2001년 12월 북경에서 열린 남북 산업표준 세미나에서 나타났다(한국표준협회 2002, 36). 중국표준화협회와 공동 주최로 남·북·중 3국의 표준화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동북아 표준정책 포럼’이 개최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중국표준화협회의 협조로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참여하지 않아 이 최초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남한은 ‘남북 표준통일 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남북표준협력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다양한 국제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한국표준협회 2003a, 24-25; 한국표준협회 2004a, 24). 이 노력은 연변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소나 조총련 과학기술협회 내에 해외남북표준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중국 국제고려학회(북한이 회원으로 참여), 중국 연변대학교 및 과학기술자협회, 일본 조총련 과학기술자협회 등과의 협력채널 다원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물론 남북 양자 협력처럼 국제 협력도 학술회의 형태로 이미 태동된 바 있다. 2001년 2월 중국 연길에서 열린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가 그것인데, 이 대회에는 남한 국어정보학회, 북한 과학기술총연맹, 중국 조선어인식학회 등이 참여해 국제표준화기구 등록을 위한 부호계 연구, 컴퓨터 자판 연구, 남·북·중 서체개발자료 상호교환이 이루어졌다(이춘근 2005, 32).

이와 같이 남북이 주최가 되는 국제 협력은 중국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1960년대에 남북이 모두 가입한 국제 표준화 기구(ISO, IEC)를 통한 국제 협력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ISO TC46/SC2(1987~93)를 통해 각국 문자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방법을 표준화함에 따라 남북이 모여 5차례의 회의를 연 것이 그 시초였다(조명철·정승호 2007, 31). 그러나 이 시기는 북한의 국제 표준화 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 표준 협력의 인식도 무르익지 않은 시기였다. 따라서 단일한 국제표준안 마련은 이루어지지 못해 남북 복수안이 제안되어 국제표준안이 아닌 기술교류의 형태로 ISO TS 11941이 1996년 12월에 발간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 사례는 오히려 남북 협력이 공식화되지 못하고 정치적 환경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조차 국제 표준화 기구를 통한 협력은 가능하다는 역설적 교훈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국제무대에서는 남북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영역이 존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0년 ISO/IEC JTC1/SC2 활동도 이와 유사한 사례다(조명철·정승호 2007, 31). 당시 북한이 이 회의에 6명의 대표를 파견하면서 협력이 이루어져 그해 9월 그리스 회의에서 한글에 관한 특별 모임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 2003년 ‘한·영·조·중·일 정보기술 표준용어사전’을 편찬한 것이 이 회의와 협력의 산물이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한글은 남북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대표적 영역으로서 국제 표준화 기구 내의 협력이 불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영역은 경제 협력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심화될수록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뜸해지기 시작한 표준 분야 교류는 2010년 5·24 조치와 더불어 전면 중단되는 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접근과 노력이 요구된다.

## V. 남북 표준 통합의 추진 방향과 전망

남북 표준 협력 추진이 향후 통일 국가의 표준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표준 통일은 분단 상황에서 진행되는 표준 협력에 기반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 협력은 성공적 표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표준 협력은 현존하는 표준 체계의 상이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

남북 표준 체계의 상이성은 상술한 바와 같이 산업구조의 차이와 표준 및 표준화의 특징에 기인한다. 이미 산업구조가 고도로 발전해 정보 통신 산업까지 높은 수준에 올라선 남한과 달리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중심의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북한은 대부분의 표준화 과정을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표준 제정 과정만 정부가 담당한다. 그에 따라 북한 규격은 강제적 구속성을 띠지만, 남한 표준은 기술기준 등 공공성이 특별히 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 수용의 원칙을 따른다.

첫째, 산업구조가 달라 표준의 필요성이 분야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남북이 공통적으로 긴요한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 경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대표적인 예다. 한국표준협회(2004c, 57)의 보고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참여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애로 사항의 76%는

남북 간 사회 경제적 이질화와 산업 기술 도입 원천의 차이에 따른 산업 표준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실제 경제 협력이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로는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도 있다(기정훈 2014, 163-167; 한국표준협회 2005b). 특히 이 분야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 향후 경제 협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현재 경제 협력이 진행되어 온 분야 외에 발전 단계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표준 협력이 긴요한 부문이 있다. 자동차(수송기계)와 정보통신 분야가 그것인데, 특히 정보통신 산업은 북한이 남한의 발전된 기술로부터 도움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어가 동일하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이와 같이 남북 간 표준 협력이 우선적으로 긴요한 부문은 건설(토건), 섬유, 자동차(수송기계), 정보통신 산업이므로 이 분야의 표준 협력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표준화 제도상 차이는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진행된 표준 협력으로 볼 때 북한은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 기구를 통해 협력에 참여했다. 하지만 북한은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표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표준화 관련 민간 기구도 사실상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표준 협력은 형식적으로 민간 기구가 주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관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경제 협력의 경우처럼 표준 협력에서도 남한 정부를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은 이에 대응하는 민간 차원의 표준화 기구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결성된 남북기술표준협력단은 이러한 협력 창구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표준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 제정 기구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나아가 남한은 표준 제정 기구를 탈국영화하되 민영화가 아니라 독립 공공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분단 독일의 표준 협력 사례가 좋은 전범이 될 수 있다. 동독의 정부 기관인 표준화계량검사청(ASMW: Amt für Standardisierung, Meßwesen und Warenprüfung)이 서독의 독립 공공기구인 독일표준협회(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와 직접 협력을 진행했다(정병기·이희진 2013). 남북 간에도 북한은 남한 정부와는 교류를 중단할 때조차 현대 기업과는 교류를 지속한 것으로 볼 때, 남한의 표준화 기구가 독립 공공기구화한다면 북한과의 표준 협력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국제표준화 기구 및 제3국을 통한 국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북한은 남북 표준통합에 대하여 북한 표준이 남한에 종속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남북이 표준을 직접 통합하기보다는 국제표준화를 통해 남북 표준이 국제표준에 부합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도 유용하다. 게다가 북한 표준의 국제표준화는 남북경협은 물론 북한의 외자유치 및 대외무역의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북한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므로 북한도 기피할 이유가 없다.<sup>11)</sup>

무엇보다 국제 표준화 기구를 통한 국제 협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조명철·정승호 2007, 54-55). ‘개발도상국의 표준화 지원을 위한 ISO 행동지침’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자금기관이 아니므로 이 행동지침은 개발도상국 원조에 참여한 정부와 기부기관, 국제개발 및 원조기구, ISO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기술적·금융적 원조에 의존한다. 곧, ISO 회원국들의 기부는 ISO 행동지침의 이행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외부기관이 ISO에 기부하면 ISO와 기부자 및 최종수혜자 간 특수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합의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의 표준화 지원을 목적으로 ISO 행동지침을 활용하는 기술원조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북한에 제공할 원조의 종류와 관련해 남한이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표준 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남북이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영역에서 공동 표준안을 작성해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한 협력 방안이다. 최근 고려인삼 국제표준을 중국이 장악했는데, 국제 인삼 표준 제정에 남북이 함께 노력했다면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다. 이런 영역은 비단 인삼 분야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전통 문화와 관련된 분야들 중에서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이 분야에서 공동 표준안 마련과 표준 획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11) 실제 국제표준화가 북한 경제에 주는 단기적 효과는 거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시장 접근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북한 경제의 개방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국제표준화는 대북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협 분야 다양화와 대북 기술이전 촉진을 통한 경협기업 생산성 제고, 남북경협 물자의 물류비용 절감 등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조명철·정승호 2007, 1-2, 64-80).



## VI. 결론

이 글은 표준이 법령과 사회 규범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규범으로서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화 거버넌스가 인간 생활과 관련되는 제반 사안들에 대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합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협치(協治)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거버넌스를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에 따라 표준 협력과 표준 통합을 한반도 통일과 통일 한국의 중요한 거버넌스 영역으로 보고, 남북 간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와 표준 협력의 경과를 분석해 표준 협력과 표준 통합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했다.

남북 간 표준 및 표준화는 개별 표준과 표준화 제도 및 국제표준화에서도 크게 달랐다. 북한은 경공업 부분이 매우 취약하고 중공업과 생산시스템 등이 강하지만 실제 표준화에서는 이 부문에서조차 질적 수준이 낮다. 반면, 남한은 정보통신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서비스 산업의 증가를 보이면서 표준화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보여준다. 표준의 적용과 구속성에 있어 북한 규격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만 남한 표준은 공공성이 특히 강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자발적 수용의 성격을 갖는다.

표준화 제도에서 남한은 서구 표준체계를 수용한 일본 표준 제도를 도입한 반면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표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주도 표준화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은 동일하다. 다만 북한은 제정뿐 아니라 인증 및 보급까지 사실상 정부가 관장하는 반면, 남한은 제정만 정부가 담당하며 인증과 보급 등 기타 분야는 민간 혹은 독립 공공 기구가 담당한다.

국제표준화와 관련해서도 남북 간 차이는 크다. 남한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는 2006년에 이미 대부분 완성되었지만, 북한 규격의 국제표준 부합화는 2002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은 공통적으로 1963년에 양대 국제 표준화 기구에 가입했으며, 북한도 비록 오랫동안 활동이 미미하기는 했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남북 표준 협력은 1991년 경제 교류를 위한 남북 기본 합의를 계기로 남북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한편 국제무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표준 제정을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양자 협력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았다. 때문에 제3국에서 이루어지거나 민간 기구의 매개를 통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표준 제정 기구들 간 협력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은 포기되지 않았으며 아직 그 단초들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국제 협력도 정부 기구들 간 대화가 어려운 현실에서 표준화 기구들 간 양자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추구되었다. 중국을 매개로 한 3자 협력이나 국제 표준화 기구를 통한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국제 표준화 기구를 통한 협력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영역에서 단일 표준안을 마련해 국제표준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와 같은 남북 간 표준 및 표준화 제도의 차이와 표준 협력의 경과를 볼 때 향후 표준 협력과 표준 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업구조가 상이해 표준의 필요성이 분야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건설(토건), 섬유, 자동차(수송기계), 정보통신 산업 등 남북이 공통적으로 긴요한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 제도상 차이와 유사성을 볼 때,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 요구된다. 또한 더 나아가 남한의 표준 제정 기구를 독립 공공기구로 전환해 협력을 더욱 수월하게 할 뿐 아니라 장차 통일 한국에서의 효율적 표준화 기구 수립을 지향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도 국제표준화 활동을 피할 수 없고 최근에는 실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제 표준화 기구 및 제3국을 통한 국제 협력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간 표준 협력이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표준 협력과 표준 통합이 통일을 이룩하고 향후 통일 후 통합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표준과 표준화는 이질적이고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핵심적인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통일과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한반도에서 이를 조정 거버넌스로 발전시켜내야 한다.

투고일: 2015년 11월 26일

심사일: 2016년 1월 22일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22일

## 참고문헌

- 강성표·황만한·류길홍·장화운·윤성권·이상조·고현우·김경석·변정용·김옥배. 2001. “남북 산업표준 비교분석 및 통일방안 연구.” 한국표준협회 보고서.
- 기정훈. 2014.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표준 통일 방안 연구: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기반으로.” 『국가정책연구』 28권 3호, 149-179.
- 김석준. 2000.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영. 『뉴거버넌스 연구』, 31-60. 서울: 대영문화사.
- 박승덕·박찬복·서상욱. 1997. “국가표준통합을 위한 남북 현황 비교 및 전략연구.” 과학기술처 보고서.
- 비전이십일컨설팅. 2004. “SOC 건설시 KS 표준의 접목 추진방안 연구.” 비전이십일컨설팅 보고서.
- 윤덕균. 2000a.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표준 통일화 과제.”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23권 57집, 103-112.
- 윤덕균. 2000b. “남북한 산업 표준화 협력 방안.” 『통일경제』 70호, 50-66.
- 윤덕균. 2005. “분야별 남북 표준 통합 추진 전략.” 남북 표준 심포지엄. 장소 미상. 10월.
- 이상조. 2001. “과학기술 격차에 따른 갈등과 대책: 산업 표준 규격에 대한 비교 연구.” 『통일연구』 5권 1호, 5-56.
- 이진량·정병기. 2014.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전략: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8권 3호, 181-207.
- 이춘근. 2005. “과학기술 표준분야의 대북 협력방안 및 사례연구.” 한국표준협회 보고서.
- 이희승 편. 2014. 『국어대사전』 수정판. 서울: 민중서림.
- 조명철·정승호. 2007. “국제표준화 활동이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에 미치는 효과 및 남북 협력 방안.” 한국표준협회 보고서.
- 정병기. 2013. “표준의 포괄적 규범성과 공동 규제성: 유럽연합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31권 3호, 241-266.
- 정병기·이희진. 2013. “동서독의 표준화 체계와 표준 통일 과정: 남북한 표준 협력에 대한 함의.” 『한국정치연구』 22집 1호, 215-236.
- 정병기. 2015a. “표준의 권력성과 조정 기능 및 표준화 거버넌스.” 『대한정치학회보』 23집 2호, 257-274.
- 정병기. 2015b. 『세상을 바꾸는 표준』.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 정병기·김찬우. 2013. “산업표준 보유 및 표준화 활동 추이로 본 한국 산업표준 정책의 특징과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29권 3호, 155-188.
- 한국표준협회 북한표준연구소. 2000. “남북한 산업표준 통일화를 위한 기초 연구.” 산업자원부 보고서.
- 한국표준협회. 1996. “북한 표준에 관한 연구.” 한국표준협회 보고서.
- 한국표준협회. 2002. “남북 표준통일 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서: 1차년도 중간보고서.” 산업자원부 보고서.
- 한국표준협회. 2003a. “남북 표준통일 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서: 2차년도 중간보고서.” 산업자원부 보고서.
- 한국표준협회. 2003b. “북한의 표준화제도 현황조사.” 산업자원부 보고서.
- 한국표준협회. 2004a. “남북 표준통일 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서: 3차년도 중간보고서.” 산업자원부 보고서.
- 한국표준협회. 2004b. “남북 산업표준 통합을 위한 로드맵 구축 사업.” 한국표준협회 보고서.
- 한국표준협회. 2004c. “남북 산업표준 협력 수요 조사 연구.” 한국표준협회 보고서.
- 한국표준협회. 2005a. “남북 표준통일 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서: 4차년도 중간보고서.” 산업자원부 보고서.
- 한국표준협회. 2005b.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기업의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표준협회.
- 한국표준협회. 2006a. “남북 표준통일 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서: 최종 보고서.” 산업자원부 보고서.
- 한국표준협회. 2006b. “남북 표준 통합 정보 DB 및 남북 표준 통합 방안 연구.” 한국표준협회.
- Brunsson, Nils. 2000. “Organizations, Markets, and Standardization.” In Nils Brunsson, Bengt Jacobsson and Associates. *A World of Standards*, 21-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unsson, Nils and Bengt Jacobsson. 2000. “The Contemporary Expansion of Standardization.” In Nils Brunsson, Bengt Jacobsson and Associates. *A World of Standards*, 1-1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usch, Lawrence. 2011. *Standards: Recipes for Reality*. Cambridge, MA: The MIT Press.
- ISO/IEC. 2004. “ISO/IEC Guide 2: 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http://www.iso.org/iso/iec\\_guide\\_2\\_2004.pdf](http://www.iso.org/iso/iec_guide_2_2004.pdf) (검색일: 2015.11.16).

Kjær, Anne Mette 저. 이유진 역. 2007. 『거버넌스』. 서울: 오름.

Rhodes, Rod AW.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ABSTRACT

---

## The Differences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System and the Process of Standardization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Direction and Prospect of Standards Unification

Byungkee Jung | Yeungnam University

In the North Korea the heavy industries have developed, the government leads most standardization processes and the small parts of national standards are appli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while in the South Korea most industries including IT-industry have developed, the government leads only the standards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most national standards are appli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tandards-establishment institutions could not cooperate between the two Koreas. The South and North Korea have cooperated in standardization only through the mediation by civi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the China or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Therefore, the cooperative standardiz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eds to be promoted as follows. First, the cooperative standardiz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irst of all in the necessary industries to common standards and economic cooperation. Second, the cooperation of civil or non-government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needs to become more active, and it is necessary also to consider the transition of South Korean standards-establishment organization to an independent public organization. Thir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third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must be more strengthened also for the reinforced activity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the unified Korea.

**Keywords:** standards unification, cooperative standardization, social unification, Korean reunification, unified Korea